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1주년

EAI 동아시아연구원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 긴급현안인식조사

EAI 여론브리핑 40호: 집권2년차 MB 정부의 도전과 여론

[보도자료]

EAI 이명박 취임1주년 긴급현안(경제/안보) 인식 여론분석팀

팀 장: 이내영(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교수)

연구진: 이숙종(EAI 원장, 성균관대 교수)

전재성(EAI 아시아안보센터소장, 서울대 교수)

정원철(EAI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1. 2년차 MB 정부가 직면한 이중의 도전

“경제위기가 정치사회 갈등으로 번질까 우려”- 경제 집중하되 사회통합/정치복원 서둘러라

○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대과제 “경제양극화 완화와 경제성장”

-세계경제 나빠졌다 89.3%, 한국경제 나빠졌다 93.1%, 가정경제 나빠졌다 50.9%

집권초기부터 이명박 정부의 지상과제는 경제 살리기였다. 경제 살리기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역시 집권초기부터 유가상승에서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이어진 세계경제 위기와 여파로 홍역을 앓고 있는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 때문이다. ‘지난 1년간 세계경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무려 89.3%가 나빠졌다(매우 악화 60.0%, 약간 악화 29.3%)고 답하고 현상 유지했다는 응답은 8.7%, 좋아졌다는 응답은 1.8%(매우 호전 0.2%, 약간 호전 1.6%)에 불과했다. 한국경제에 대해서도 나빠졌다는 응답은 93.1%(매우 악화 58.9%, 약간 악화 34.2%)로 부정적인 평가로 일관했다[그림1]. 하지만 국민들의 개인 호주머니 사정을 보여주는 집안경제 사정에 대해서는 나빠졌다는 응답이 50.9%에 그치고, 현상유지(43.2%)하거나 호전되었다(5.8%)는 응답이 과반수에 달했다.

국내외 안팎의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는 정부가 경제문제 해결을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놓아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진다. 2008년 총선 직전 3월 조사에서 정부가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로서 ‘경제양극화 완화’를 꼽은 응답자가 46.9%, ‘경제성장’을 꼽은 응답자는 32.8%였다. 열명 중 여덟명(79.7%)은 정부가 경제문제해결에 집중할 것을 요구한 셈이다. 그 다음으로 는 응답자 중 6.3%가 ‘국민통합의 과제’에 국정최우선 순위를 부여했다. ‘개인의 삶의 질 개선’(5.5%)이나 ‘정치개혁’(3.6%) 등 다른 국가적 아젠다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 ‘남북관계 개선’(1.7%)이나 ‘안보강화’(0.2%) 등은 국민들의 관심 밖이었다.[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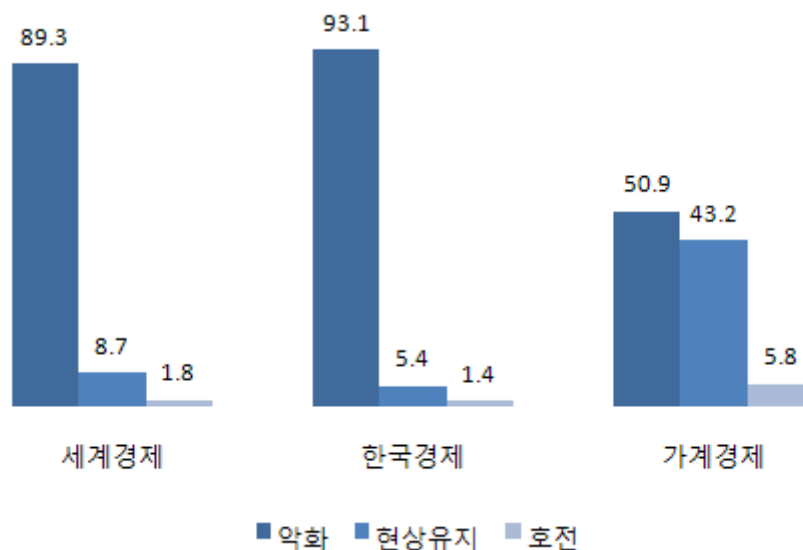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국민들은 정부가 여전히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경제양극화 완화 및 경제성장 등 경제문제 해결을 꼽은 응답자가 총 60.5%에 달해 정부가 주력해야 할 국가 아젠다 1, 2순위를 지켰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위기로부터 시작된 국민들의 불안감이 사회영역과 정치영역으로 번져가고 있다는 점이다.

○ 계층균열과 정치공백 우려 목소리 커져

경제문제를 국가 최대현안으로 꼽는 응답자들이 여전히 가장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규모는 1년 전에 비해 줄어들었다. ‘경제양극화 완화’를 꼽은 응답자 비율이 줄고(46.9%→33.9%), ‘경제성장’을 지목한 응답자들도 줄었다(32.8%→26.6%)[그림2]. 대신 ‘국민통합’과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8년 조사와 비교하면 MB정부의 최대 과제로서 ‘국민통합’을 꼽은 응답자는 6.3%에서 13.9%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MB정부 집권 1년 차에 쇠고기 파동이나 정권인수과정, 대운하 논란을 거치며 정부, 정치권 및 국민들 사이에 큰 균열이 생긴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개혁’을 꼽은 응답자도 3.6%에서 7.4%로 증가했다. 정치권은 경제위기로부터 파생되는 정치적 갈등을 조절하기보다는 이를 증폭시켜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치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것은 그동안 국회나 정치권이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과 힘겨루기에 힘을 소진한 것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다. 당장 경제문제에 묻혀 잠복되어 있지만, 정치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국민들의 불안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경우 정치개혁을 주도해야 할 정치권 전반이 정치개혁의 대상으로 전략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 1년을 체험한 국민들이 정부와 정치권에 주는 메시지는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되 사회통합과 정치의 정상화에 매진하라는 것이다.

[그림1] 지난 1년 간 세계, 한국, 가계경제 평가



[그림2]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국가과제 인식 변화

2008년3월(총선패널1차)			2009년2월	
경제양극화완화	46.9	→	경제양극화완화	33.9
경제성장	32.8	→	경제성장	26.6
국민통합	6.3	→	국민통합	13.9
삶의 질 개선	5.5	→	정치개혁	7.4
정치개혁	3.6	→	삶의 질 개선	6
국제경쟁력강화	2.1		국제경쟁력강화	5.7
남북관계개선	1.7		남북관계개선	4.2
국가안보강화	0.2		국가안보강화	1.5
모름/ 무응답	0.6		기타	0.7
기타	0.3		모름/ 무응답	0.1

2. 경제, 어떻게 풀 것인가? “경제양극화 해소-경제성장 병행하라”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 대신 성장을 통한 양극화론 힘 실려

현재 다수 국민들이 국정 최대 과제로 경제 살리기를 꼽고 있는 가운데 경제위기를 바라보는 진단과 처방에는 시각차이가 존재한다. 즉 현재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경제양극화 해소’를 꼽은 응답과 ‘경제성장’을 꼽은 응답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조사에서 국민들은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로서 경제양극화를 꼽은 응답자들(33.9%)이 경제성장을 꼽은 응답자(26.6%)들보다 많았다.

○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 대신 ‘성장을 통한 양극화론’ 힘 실려

- 경제양극화 해소 방법으로서 ‘성장우선 정책’ 지지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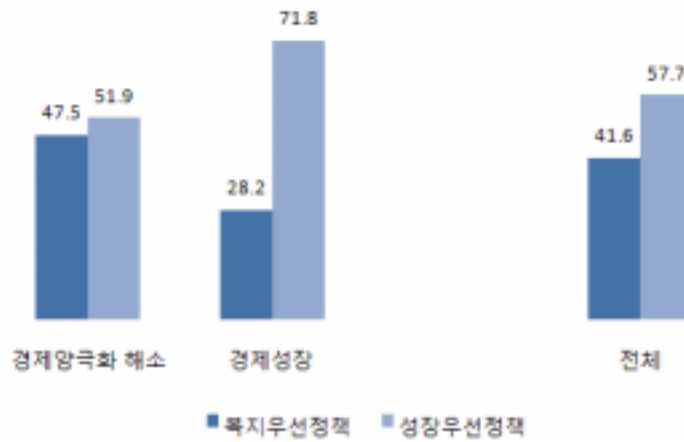
참여정부 이래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치권에서는 경제살리기의 중점과제로서 ‘경제양극화 해소’를 강조하는 입장과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정치권과 전문가 그룹 내에서는 대체로 경제양극화에 무게를 두는 입장은 복지정책을 강조하는 경향을,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입장은 감세와 규제완화를 우선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국민들은 경제 살리기의 최대과제로서는 경제성장보다는 경제양극화 해소를 보다 중시하는 반면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는 복지정책의 강화보다는 성장우선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를 살릴 정책방향으로서 복지정책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 41.6%였지만 성장우선 정책을 펴야 한다는 입장이 57.7%로 더 높았다. 뿐 만 아니라 경제양극화 해소를 국정최우선 과제라고 답한 층에서조차 경제정책은 성장위주 정책을 펴야 한다는 입장이 51.9%로 과반수를 넘어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라도 성장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복지우선정책을 펴야 한다는 입장(47.5%)과 팽팽하게 맞섰다[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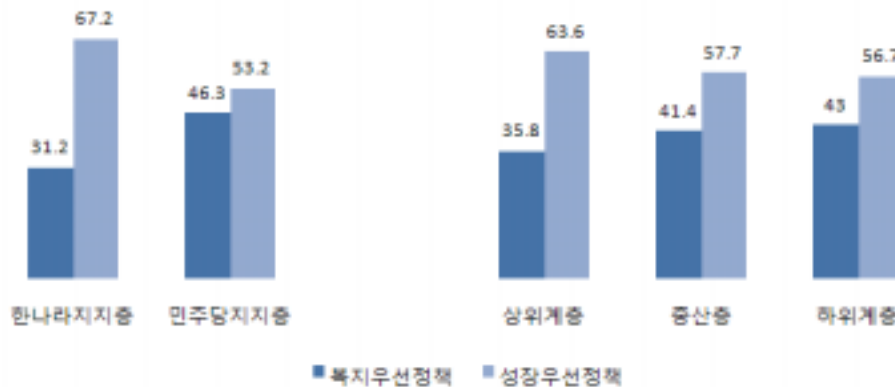
특히 성장정책을 우선하는 한나라당에 비해 양극화해소를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는 민주당의 지지층에서조차 성장우선 정책을 펴야 한다는 입장이 54.9%였고 복지정책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은 45.1%에 그쳤다. 계층적으로 살펴봐도 상위층에서 성장중시 정책을 선호하는 응답이 63.6%였지만, 경제악화를 더 크게 실감하고 있는 하위계층에서도 복지정책 우선(41.2%)보다는 성장정책이 중요하다는 입장(56.7%)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그림2]

이는 과거와 같이 ‘경제성장=시장우위 성장정책’, ‘경제양극화 해소=복지정책’의 이분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제 살리기의 목표를 성장 그 자체에 두기보다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양극화 해소에 두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양극화 해소를 실현하는 방법론으로서 성장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1] 국정최우선 과제별 선호하는 경제정책(%)



[그림2] 정당지지 및 계층인식별 선호하는 경제정책(%)



○ 경제적 타격 체감도, 계층 간 차이 크고, 자신 처지 비하하는 경향으로 이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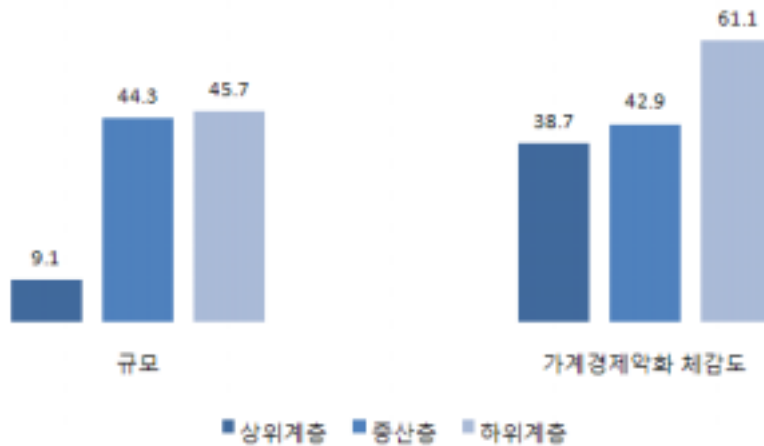
- 상위층 가계경제 “나빠졌다” 38%, 중산층 “42.9%”, 하위층 “61.1%”

경제양극화 현상은 자신이 어떤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경제위기를 실감하는 정도에 있어 상반된 평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확인된다. 현재 자신을 상위계층으

로 생각하는 사람이 9.1%, 중산층으로 여기는 사람은 44.3%고, 하위계층에 속한다고 보는 응답자는 45.7%에 달하고 있다. 지난 1년 사이에 가정경제가 악화되었다고 실감하는 비율이 상위층 중에서는 38.7%에 불과했고,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여기는 사람 중에서는 42.9%였다. 그러나 자신을 하위계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무려 61.1%가 집안 경제사정이 나빠졌다고 대답했다.[그림3]

실질적인 경제사정의 격차 못지않게 스스로 느끼는 계층간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도 양극화 현상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OECD 계층 분류기준을 적용할 때 한국에서 중간소득층 이상이 되는 월 2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을 갖고 있는 응답층에서도 자신을 ‘하위계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적지 않았다. 200만원-300만원 소득층에서는 절반이상이 하위계층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300-400만원 이하의 소득층에서도 스스로를 하위계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44.7%에 달했다. 특히 400만원-500만원 소득층이나 500만원 이상의 상위 소득층에서조차 스스로를 하위계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각각 27.9%, 20.3%로 적지 않았다. 이는 결국 많은 국민들이 객관적인 소득위치 보다는 심리적으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비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을 비교하는 준거계층을 상당히 높게 잡음으로써 발생하는 심리적 박탈감 때문으로 여겨진다.[표1]

[그림3] 계층 규모와 계층별 가정경제 악화 체감비율(%)



주1. 가정경제 악화 체감도는 “좋아졌다”, “현상유지”, “나빠졌다” 중 “나빠졌다” 응답비율
 주2. 규모에서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표1]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으로 본 계층인식 디플레이션

월 가구소득	계층인식	상위계층	중산층	하위계층	계
200만 미만		6.0	22.8	71.1	100
200-300만 미만		6.1	43.7	50.2	100
300-400만 미만		7.8	47.6	44.7	100
400-500만 미만		10.3	61.8	27.9	100
500만 이상		20.3	59.5	20.3	100
총합		9.3	44.6	46.1	100

3. 이명박 정부, 경제 살리기 성공하려면...

○ 지지율 변동에 일희일비 말고 정치적 신뢰기반을 확대하는 데 힘써야

- 불신 크면 정부정책에 대한 맹목적 냉소 커지고, 정책효율성 저하시켜
- 국정지지 32.2%, 정부신뢰 29.4%, 경제위기 대처 긍정평가 20.3%

경제 살리기라는 전 국민적 기대를 안고 출발한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 주요 인사정책 및 광우병 쇠고기 파동을 거치면서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최단시간에 가장 낮은 지지를 받는 정부로 전락했다. 그러나 촛불시위가 잦아든 취임6개월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다소 반등하여 집권 2년 차를 앞둔 현 시점에서는 32.2%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집권 2년 차 지지율과 비슷한 수치이다.[그림1]

이러한 지지율 회복과 맞물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하반기부터 경제위기 해결이라는 당면 과제를 시작으로 4대강 정비, 미디어법 개정 등 이명박 정부의 색깔을 담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국정지지율의 변화를 내심 반기며 짧게는 4.29 보궐선거, 길게는 2010년 지방선거를 내다보며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끌어올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치인이 자신에 대한 지지율을 고려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면 국정운영의 방향각각을 상실할 수 있다. 국정지지율은 집권초기 높은 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허니문 효과(honeymoon effect), 외적 요인에 의한 위기시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결집효과(Rally-Round-the-Flag effect), 객관적인 경제 상황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여 가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이론이나 서구 민주주의의 경험은 정부가 일시적인 지지율 등락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국민들의 안정적인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치적 신뢰수준에 주목할 것을 주문한다. 정치신뢰란 정부나 정치인이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심리적인 믿음으로 쉽게 형성되지도 않지만 일단 형성되면 쉽게 와해되지도 않는다. 반면 정치신뢰는 정책추진과정(procedure)과 결과물(product)에 대한 장기적인 평가 속에서 형성된다. 한 두 번의 정책실패는 지지율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정치불신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가 반복되고 이를 개선하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경우 불신과 냉소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즉 무엇을 해도 미운 대상이 된다. 이 단계에서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건 그 내용을 들여다보기도 전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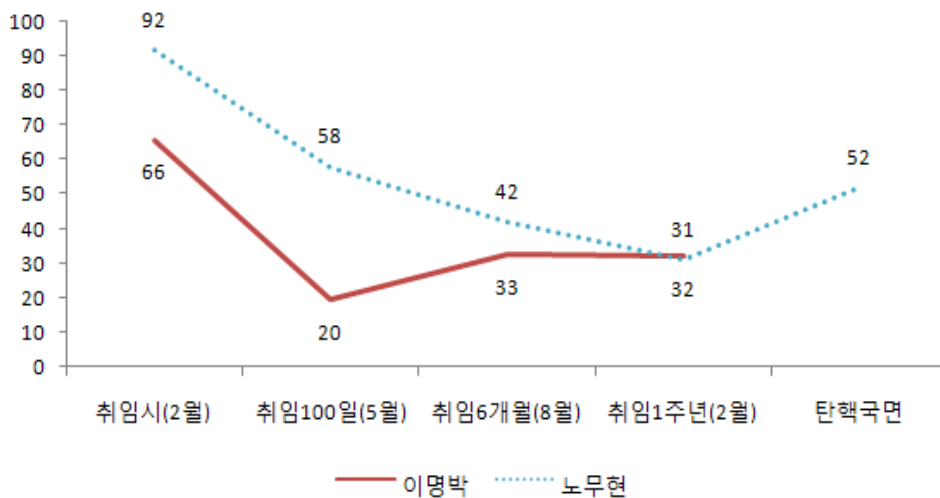
4년 임기를 남긴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전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1년 만에 30%대로 떨어진 이래 야당의 탄핵으로 불과 3개월 만에 과반수를 넘는 50% 지지율을 회복하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는 반전을 경험했다. 그러나 탄핵이후 노무현 정부는 다시 지지율의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는 가

운데 집권하반기에 한나라당과의 연정을 생각해야 할 정도로 국정운영의 난맥을 경험했다. 이는 사학법 개정, 과거사 청산, 국가보안법 개정 등 이념적 색채가 강한 정책들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야당의 반발을 부르고, 국민들의 ‘경제가 나빠졌다’는 호소에 대해서는 ‘보수층의 공세’로 일축했던 것이 국민들 사이에 정부에 대한 신뢰를 급격하게 와해시킨 결과로 볼 수 있다[그림1]. 실제 EAI와 중앙일보가 2004년부터 매년 실시한 파워기관 신뢰영향력 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계속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청와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수준은 하위권(25개 조사기관 중 17~21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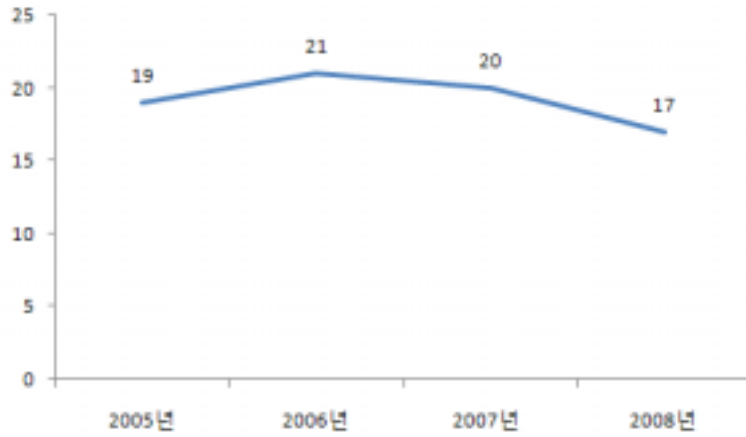
이명박 정부 역시 가변적인 국정지지도보다는 국민들이 정부에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를 신뢰한다는 비율은 현재 29.8%로 국정지지도 32.2%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정지지도만 보면 현재의 경제위기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위기이지만 동시에 기회일 수 있다. 경제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야당과 일부 사회세력들이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용산참사나 미디어법 개정 등을 계기로 야당과 시민사회의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이것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소위 결집효과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그림3].

그러나 앞으로 국정지지도가 오른다하더라도 정치적 신뢰수준 역시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정부에 대한 신뢰 유무는 정부의 정책능력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를 신뢰하는 사람은 정부가 경제위기에 잘 대처하고 있다는 응답이 47.4%,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2.6%로 팽팽히 엇갈린다. 그러나 정부를 불신하는 사람은 무려 90.6%가 압도적으로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림4]. 결국, 현재 정부가 약속한 경제살리기 및 선거공약을 추진함으로써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성공한 정부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회복이 전제되어야 한다. 단기간의 국정지지도 변동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정책추진과정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합의된 요구사항을 정책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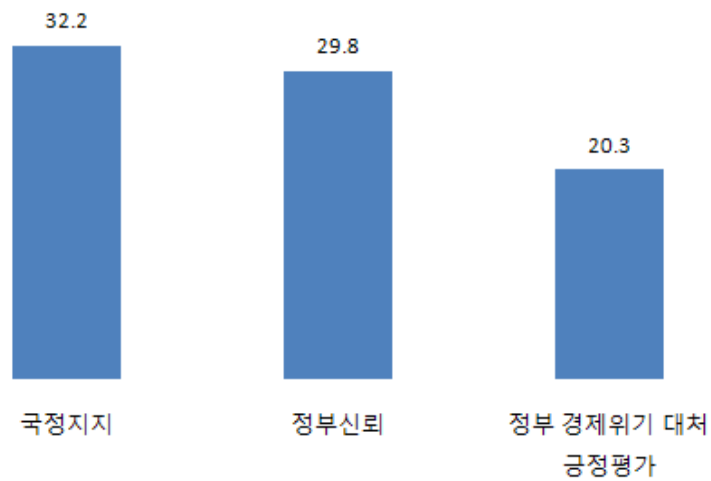
[그림1] 노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동일시점 지지율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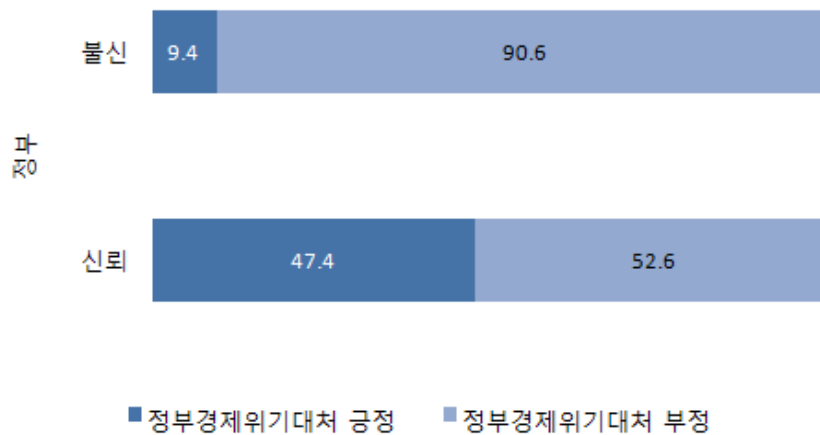
[그림2] 25개 파워기관 중 청와대 신뢰도 순위 변동



[그림3] 이명박 정부 국정지지율, 정부신뢰율 및 경제위기 대처 긍정평가비율(%)



[그림4] 정부 신뢰 여부에 따른 정부의 경제위기 대처에 대한 평가(%)



4. MB 정부가 해결해야 할 안보위협,

시험대에 오른 새로운 한미동맹, 북한의 강경드라이브 - 국민 불안감 커지고 있어

참여정부 내내 보수적 부시행정부와 진보적 노무현 정부 사이에서 이념적 미스매치가 한미 공조체제를 불안케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마찬가지로 리버럴 성향의 오바마 행정부와 보수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어떠한 한미공조모델을 만들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북한의 강경정책은 아직 틀이 잡히지 않은 한미동맹을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최근 북한의 대포동미사일2호 발사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 연일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발언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외교정책을 총괄할 힐러리 클린턴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북한의 압박은 더욱 강해지는 형국이다.

○ 커지는 안보 불안감,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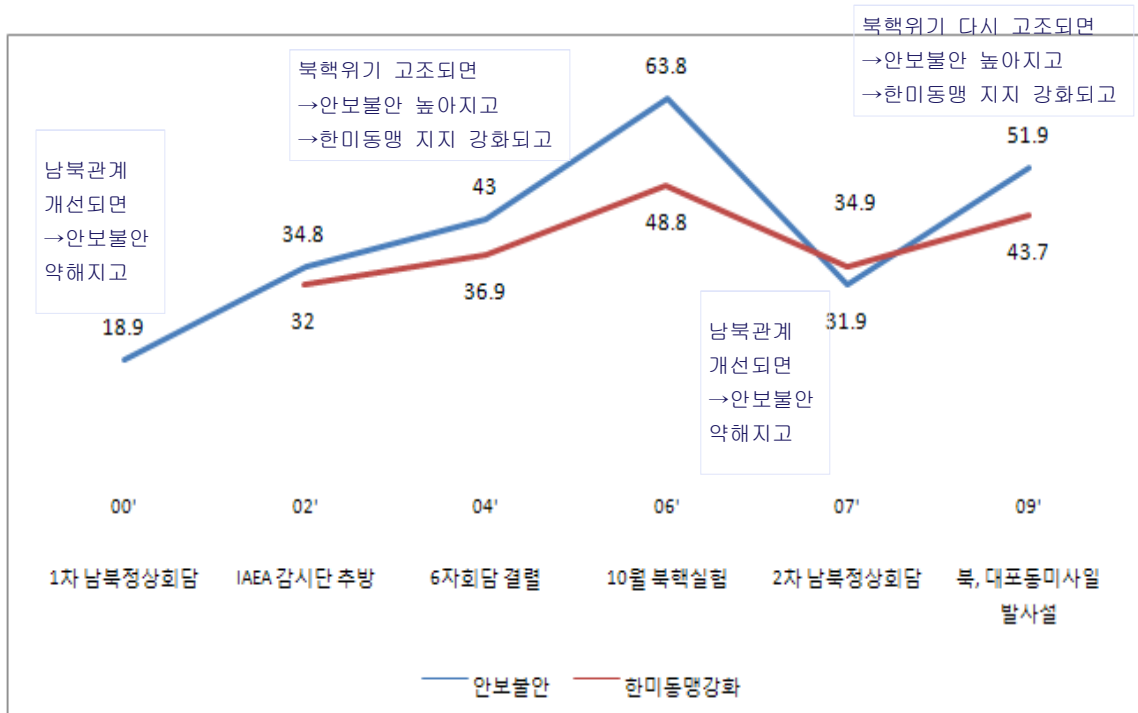
- “한국 안보 불안하다” 51.9%, “북한 전쟁, 군사 분쟁 가능성 높다” 38.4

혼란스러운 긴장국면이 전개되는 가운데 한국인들의 안보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현재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을 물어본 결과 전체 국민의 과반수에 달하는 51.9%가 “불안하다”고 답했고 “보통이다”가 30.2%,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은 17.5%에 그쳤다. 또한 최근 북한이 엄포놓고 있는 것처럼 ‘전쟁이나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높다 3.9%, 약간 높은 편이다가 34.6%였다. 그다지 높지 않다는 의견이 52.5%, 전혀 없다는 의견은 8.4%였다. 열 명 중 네 명꼴로 북한이 군사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수년간 한국 국민들의 대외인식을 추적해보면, 북한의 핵위협이 커지면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남북관계가 화해관계로 접어들면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는 패턴을 보여 왔다.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2000년에는 한국 안보가 불안하다는 응답이 18.9%에 불과했다. 2002년부터 시작된 2차 북핵위기가 2004년을 거치면서 한국인의 안보 불안감은 34.8%→43%로 높아지고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무려 63.8%까지 치솟았다. 이러한 안보불안감은 대선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재개된 2차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31.9%로까지 떨어졌고, 올해 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다시 51.9%까지 상승하고 있다.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이 불안해질수록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북핵위기가 고조될수록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반대로 남북관계가 화해무드로 접어들면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준다.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 이후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2006년까지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여론은 32.0%→36.9%→48.8%로 상승하지만, 다음해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며 34.9%까지 떨어졌다. 현재의 긴장국면 하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율은 43.7%로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1]

[그림1] 2000년대 이후 남북관계와 안보인식/한미동맹 인식 변화(%)



○ 북한에 대한 우호적 인식 급감, 동시에 북한에 대한 유연한 대응 주문

한국 국민들은 한미동맹을 한반도 긴장을 억지하는 요인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동시에 한미동맹에 대한 태도가 남북관계 및 북한에 대한 태도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과거에 비해 많이 누그러지기는 했지만 정치권이나 전문가 그룹 내에서는 여전히 안보현안은 ‘친미 대 반북’, ‘친북 대 반미’의 이분법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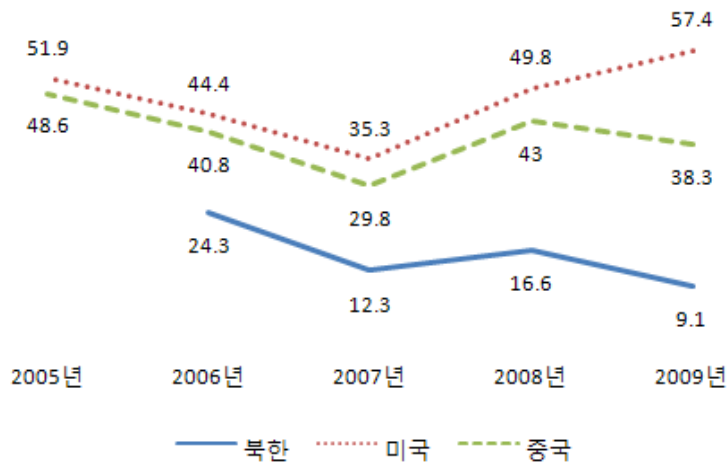
그러나 국민들의 인식은 이미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틀에서 벗어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북한이 냉전 이후에도 서해교전과 같은 남북 교전상황, 북한의 핵개발 등과 같이 한반도 및 지역질서에 위기국면을 조성하면서 일반 국민들 사이에 북한에 대한 우호적 인식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는 EAI가 2005년 이후로 매년 조사한 주변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뚜렷하게 확인된다. 2006년 조사에서 한국 국민의 24.3%가 북한에 우호적인 평가를 한 이래 이번 조사에서는 9.1%로까지 떨어졌다. [그림2]

중요한 점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가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기와 비교해보면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가 크게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1년이 지난 2004년 조사에서 대북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8.4%,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19.8%에 불과했지만 축소(47.6%)하거나 중단해야 한다(22.2%)는 의견은 합해서 69.8%에 달했다. 즉 DJ 정부로부터 시작되어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진 소위 햇볕정책에 대해 북한 퍼주기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견제심리가 작동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이명박 정부 집권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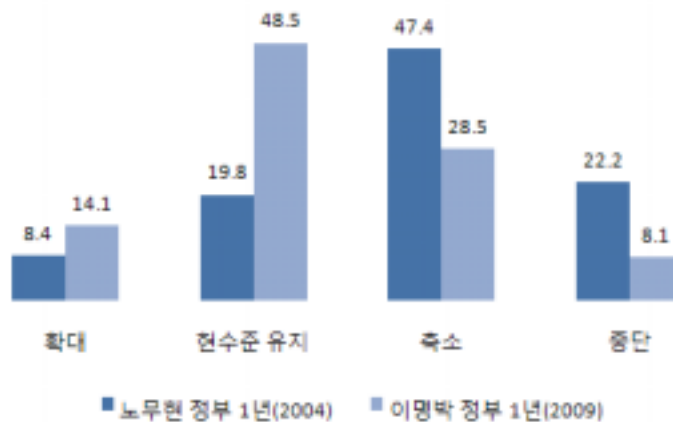
반대로 대북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14.1%,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8.5%로 크게 늘어났고, 대북지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28.5%,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8.1%에 불과해 전체적으로 유지 확대하라는 의견이 다수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집권 초기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는 가운데 남북관계가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에 대한 견제이자 북한에 대해 보다 유연한 대응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3]

한국국민들은 북한에 대해 90% 가까이가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미국의 군사적 수단 사용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많고 금강산 등 대북 사업 및 대북 지원에 대해 일관된 지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여론에 있어서도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봉쇄보다는 협력과 지원을 통해 북한을 관리하겠다는 관여(engagement)전략식 사고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2] 한국인의 북한, 중국, 미국 평가 변화 “긍정적” 응답비율(%)



[그림3]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



주1.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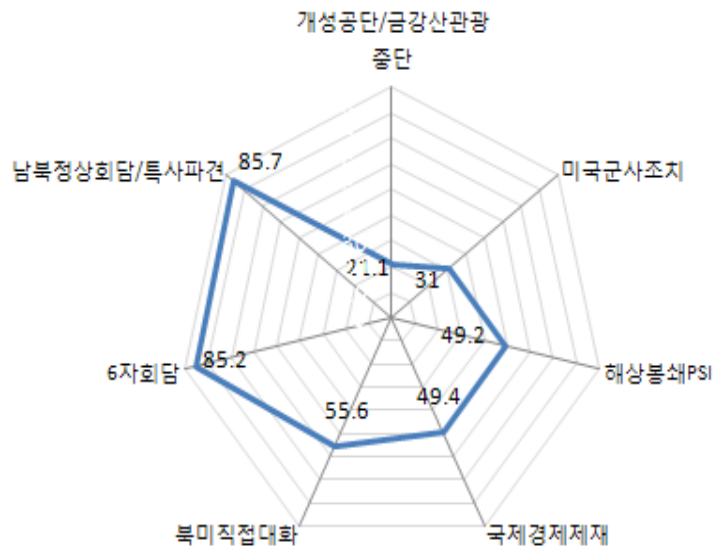
○ 바람직한 북핵해법, 대화가 우선- 국민들 사이에 북핵용인 전망 커지는 것은 우려스러워
 - 남북회담/특사방문85.7%, 6자회담85.2% > 북미대화55.6% > PSI49.2% > 미군사조치
 31% > 개성공단중단 21.1%

바람직한 북핵해결방안에 대한 인식에서도 이러한 태도는 확인된다. 북핵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여러 방안 각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남북정상회담이나 특사파견’안에 85.7%가 바람직하다고 했고, ‘6자회담’의 형식에 대해서도 85.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을 뺀 ‘북미간 직접협상’ 방안도 55.6%가 지지하고 있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국제사회 제재’ 방안이나 ‘해상봉쇄를 포함한 PSI’에 대해서도 49.4%, 49.2%로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반면 ‘미국의 군사조치’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중단’과 같은 강한 대북 압박책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각각 31%, 21.1%에 그쳐 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그림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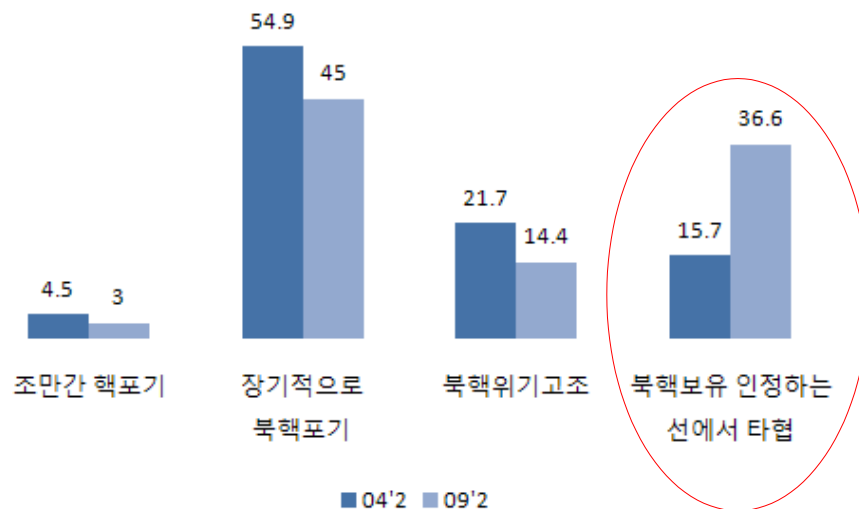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불투명했던 2006년 이전과 북한의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능력이 입증된 이후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북한의 핵보유가 인정되는 선에서 타협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보유가 불투명했던 2004년의 경우 조만간 포기할 것이라는 의견은 4.5%, 시간은 걸리겠지만 핵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54.9%로 낙관적 전망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조만간 포기할 것이라는 응답은 3%, 장기적으로 포기할 것이라는 응답은 45%로 10%p 가량 줄어들었다. 반대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선에서 타협될 것’이라는 전망이 2004년 15.7%에서 36.6%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그림5]

이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북핵공방으로 인한 북핵피로증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 신임 고위관계자들이 북핵 폐기 정책으로부터 북한핵을 인정한 상황에서 확산을 막는 북핵관리정책으로 선회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국민 사이에서 결국 북한 핵을 용인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는 것은 우려스럽다. 한반도 평화정착의 전제조건이자 남북간 핵심 합의사항이기도 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무너진 조건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가능성은 더욱 멀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4] 바람직한 북핵해법 “바람직하다” (%)



[그림5] 핵실험 이전과 현재의 북한핵문제 해결전망 비교(%)



주1.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 한국외교의 과제 : 한미동맹 변화의 기회와 도전, 한중 국민간 국민감정 충돌 예방

- 새로운 한미협력 모델구축과제 시급, 중국대안론을 급격히 대체한 중국견제여론도 문제

한편 미국에 대한 평가는 2007년까지 줄곧 나빠지지만 2008년 이후 상승곡선을 걷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57.4%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현상과 맥을 같이 한다. BBC에서 매년 실시하는 국제여론조사 결

과에 따르면 부시행정부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이 완화되고 다자협력을 강조하는 오바마 정부의 등장으로 미국에 대한 평가가 크게 개선되었다. 미국에 대한 우호적 평가와 기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새로운 미국대통령과 한미동맹의 진전된 모델을 만들려는 이명박 정부에게 유리한 정치적 환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핵해결과정에서 얼마나 한미공조체제를 확고히 유지할 수 있을지 아직은 가변적이며, 양국 간 갈등소지가 큰 한미FTA 등 잠복된 변수들도 만만치 않았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에서 미국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었을 때 정치권에서 반미성향의 정치인들이 중국을 미국의 대안으로 이해하는 인식이 나타난 바 있다. 일반국민들 사이에서도 2005년 조사에서는 중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미국에 근접한 48.6%까지 높아진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동북공정 문제가 불거지고 중국의 부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올 조사에서는 38.3%까지 떨어졌다. 현재 중국 네티즌과 한국 네티즌 간 온라인 갈등이 심각해지는 등 상호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있는 양상을 반영한 결과다. 북핵문제 및 경제협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한중우호 관계를 만드는 것도 현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양국 국민들이 공히 민족주의적 정서가 강하다는 점도 이러한 감정대립이 예상보다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보다 적극적인 정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1]